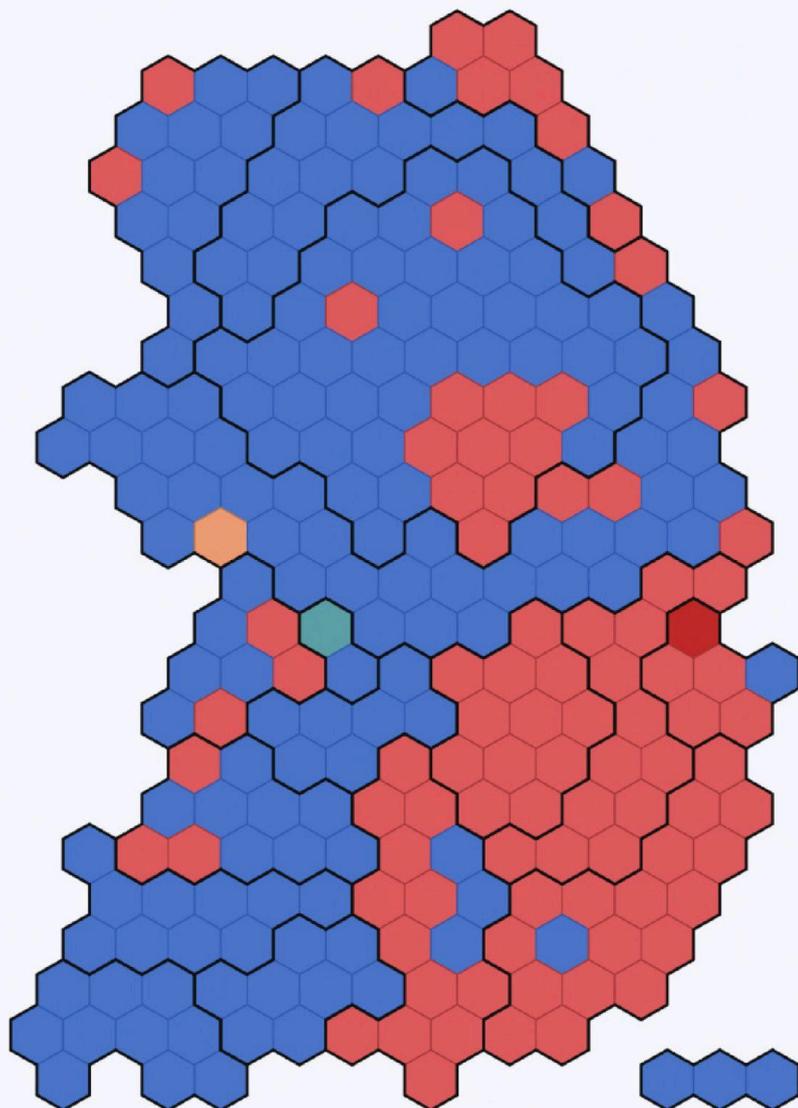


2024 South Korea General Election Results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20대, 21대에 이어 22대까지 3연속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을 통해 여당의 다수당 탈환을 목표로 했었으나 결국 큰 의석수 차이로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내내 여소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몇 번의 변곡점은 있었지만 이 같은 결과는 대체로 예견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투표'라는 선택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명령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 민의를 살펴보고 선거 이후의 정치·경제적 변화 전망과 시사점을 정리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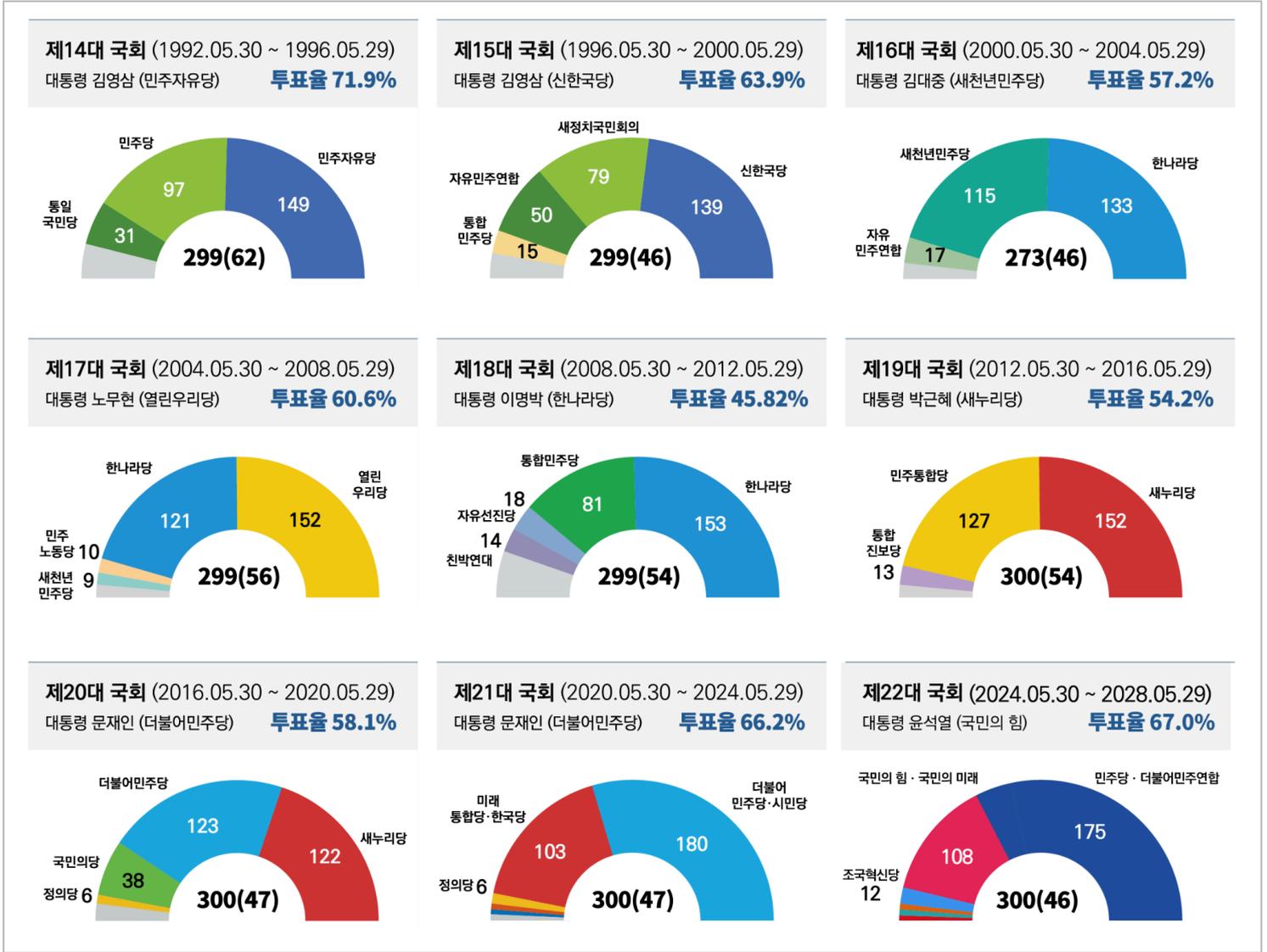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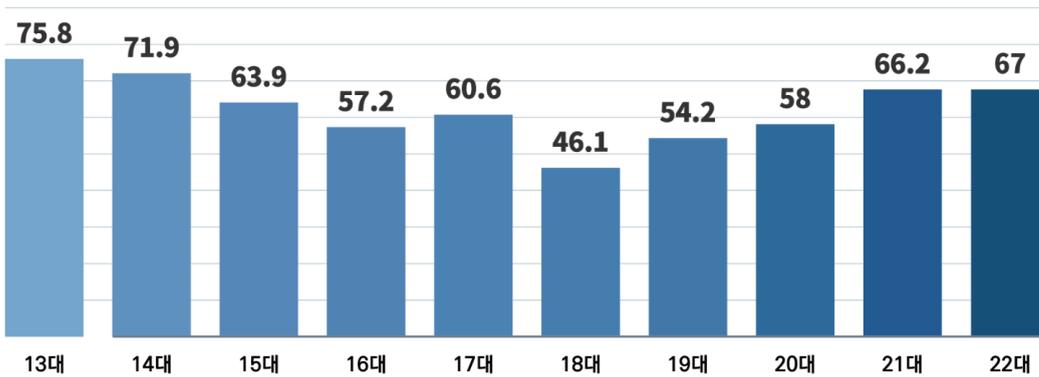
22대 총선 의석



역대 총선 주요 정당 의석 수



역대 총선 투표율



단위: %



사진: 한국교육신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총선 정책 비교

대한민국의 정책 환경은 4월 10일 총선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공약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의 주요 공약들을 비교 분석하여, 여러분의 사업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내 기업들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들, 그리고 국내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해외 기업들은 이번 뉴스를 통해 양당의 공약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함께 고민하고 성공적인 정책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공약들은 대부분 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양당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의석수 과반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분야/정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small>PEOPLE POWER PARTY</small>
	양당 모두 반도체 및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일부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산업증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예산 국가예산 대비 5% 수준 확보 반도체, 미래형모빌리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지능형로봇,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지원 종합반도체생태계허브 구축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저작권 보호 지원 벤처투자 20조원 달성 위한 모태펀드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바이오, 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 신산업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지역 토지구제 전면 재검토 K-콘텐츠 집중지원(웹툰, 영상콘텐츠 등) 외국인 고용한도 탄력성 강화 전세계 청년 소통 교류 '스페이스-K' 창업허브 조성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R&D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공정거래 보호 강화에 주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부담 완화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스타트업 전용 R&D 예산 대폭 확대 공동교섭권 보장,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 공정 안전망 구축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전자상거래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특성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경비, 원자재와 같이 인상분 납품대금 반영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시간 단축, 근로 조건 개선 및 모든 노동자의 권리 강화에 일부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근로자 복지 확대와 육아 지원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4일(4.5일)제 도입 지원 (2030까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 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노동자 차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유급공휴일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향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활성화 정확한 인턴 근무 기간 명기 및 무분별 연장 금지

<p>외교 및 무역 정책</p>	<p>더불어민주당은 현 외교 방향성 재편과 역사에 기반한 대일 관계 재정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한 관련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p>	
<p>에너지 및 환경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4강 외교의 재편 •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 기초한 외교 구현 • 역사 직시하는堂堂한 대일외교 추진 • 군사적 긴장 조성 중단, 평화 분위기 조성 촉구 • 무기체계 도입 시험평가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 바탕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줄을 차단 • 북한이탈주민 지원 • 이산 및 납북자 가족의 고통에 응답 • 헌법 가치에 충실한 통일 준비 •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
<p>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자 보호</p>	<p>양당 모두 금융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강화에는 공통된 취지의 정책을 제시한 반면, 금융투자세,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p>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전제로 ISA 혜택 강화 • ISA 비과세 한도 폐지 •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ISA 비과세 한도 상향 (200만원->500만원) •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및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 상임위 내 지원 조직 신설 추진 •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 국회 입법 품질 강화 (사전사후규제영향분석/평가 도입) • 공정거래 통합분쟁조정법 제정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제조물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 (제조물 범위 확대 및 결함 요건 완화) • 사용자 친화적 게임/e스포츠 환경 구축 	

출처 : 양당 정책집 및 정당별 주요 추진 정책 관련 언론보도 등 발취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마음 읽기

1. 모든 이슈를 압도한 정권심판론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심판’이었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을 들고 여·야가 격돌했으나 야당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야당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비명횡사’라는 신조어가 태어날 만큼 공천학살 논란이 일었고 선거 막판에는 일부 후보들의 물의(망언, 사기대출, 대물림, 전관예우 등)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슈도, 인물도, 바람도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권심판론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2년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했던 여당이 왜 이렇게 역대급 참패를 당했을까요? 향후 정치학자들의 많은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가 물가·경제·민생

관리에 실패하면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게 큼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수석 관련 스캔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을 적대시하고, 인사를 독단적으로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오만함으로 비쳐졌습니다.

2. 국가의 주인은 국민

공직자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머슴입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머슴이 주인 행세를 잘 못하면 주인들은 분노합니다. ‘심판’을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입니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만에 가장 높은 67%의 투표율을 보여준 것과 사상 최고의 재외국민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계 115개국, 178개 공관에 마련된 220개 투표소에서 14만7,989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9만2,923명이 투표를 해 역대 최고치인 62.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같은 투표 열기에는 야당에 대한 심판도 물론 섞여 있었습니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야당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한 국민의 불편한 마음, 무거웠던 마음을 패배한 여당은 물론, 승리한 야당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3. 분열과 갈등에서 통합과 협치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길이가 51.7cm였습니다. 사상 최장인데 무려 38개 정당이 선거에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당 숫자 역시 1987년 민주화이후 최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당이 출현한 것은 그만큼 기존 정치권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존 정당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니까 아예 직접 만들어서 정치에 뛰어든 것이지요. 그럼에도 의석수 20석을 넘겨 국회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된 정당은 결국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곳 뿐이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도록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한 결과이겠지요.

선거 내내 상대방의 흠집 내기에 급급한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표를 구걸하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만발한 역대급 포퓰리즘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런 정치권에, 22대 국회에 국민이 내리는 명령은 ‘통합과 협치’입니다. 이 명령은 여·야의 수뇌부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미뤘었던 여·야 영수회담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협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가 미래세대를 바라보고 작아도 중요한 일을 하나씩 원칙을 존중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협치의 사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응원이 중요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직후 여당에 참패를 안겨준 민의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도 들어있다”는 관계자 설명과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 대대적인 인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실행으로 잘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5월 3일이 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223건의 규제혁신 법안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98개입니다. 20대 국회도 임기 종료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임시국회에서 133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기간도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거 이후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전망과 시사점

1. 여·야의 극한 대립과 정쟁 가열

단독 과반(150석)을 넘어선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연히 민주당 몫이 되었는데, 여·야의 입장차이가 클수록 의장의 역할은 커집니다. 의장 직권으로 각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본회의 개최여부를 정하는 것도 의장 몫입니다. 상임위 위원장도 대부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과 예산안, 주요 공직자(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원장 등)인사는 모두 국회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게 됩니다. 선거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10석 넘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범야권의 대정부 공세는 더욱 가열차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범야권이 180석을 넘기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해졌고, 소수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무력화(24시간내 강제종료)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개표 초반 한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고 동료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지킨 정부·여당이 행정권을 무기로 강경하게 맞설 경우 강대강으로 여·야가 맞붙었던 21대 국회의 지난 4년보다 어쩌면 더 격렬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개헌 논의와 국회 세종시 이전 본격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4년 연임가능제도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치 체제입니다. 독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했으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도 승자독식 논란과 함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선거에도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대 정당의 꿈수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87년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선 어떤 형식으로든 개헌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올 전망입니다.

개헌과 맞물려 국회이전 논의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선거 막판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왜 하필 이때 공약하나?”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원래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공약으로서 그동안 야권에서 주도해온 이슈였습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찬성하는 의제가 된 셈인데 여의도 구태정치 해소, 수도권 집중억제 등 대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걸림돌도 많아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3. 시행령 정치의 재현 가능성

여소야대 국회가 재현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범야권의 의석수가 200석에는 미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까지 무력화시킬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발의 법안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부결되는 수순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여·야의 대승적인 합의가 없는 한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은 제·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회기능 수행을 위해서라도 여·야의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자각이 중요합니다.

4. 정치발(發) 불확실성의 증가

거대 야당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정부는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강경하게 맞선다면 그 불통이 엉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환경·복지 등 주요 정책에서 여·야가 격돌하면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자 입맛에 맞게 상대방 공격을 하는 가운데 기업 등 민간부분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출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 한 예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상태에서 누구의 힘이 센 지에 따라 국가운용방향이 정해진다면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고, 민간부문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운영, 재무 상태, 전략적 방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한국경제가 현재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건의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구촌 선거의 해’로 불릴 만큼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가까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외지향적 국가에서는 외국의 선거가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지켜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5. 기업 생존과 직결될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정치지형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세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정책 전환 리스크입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책이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특히 세금, 노동, 환경, 기업 규제 분야를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는 시장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정치적 변화는 투자 유치, 소비자의 선호, 시장 수요, 국제 무역 조건 등 시장 전반에 걸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인식 및 평판 리스크인데 정치적 분위기 변화가 기업의 사회적 인식과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축’이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조직이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은 과거보다 훨씬 가혹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선제적, 적극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내부 임직원과 협력업체, 고객을 잘 섬기고 배려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섬세하고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평판과 명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일을 헤쳐 나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유권자의 속마음 들어가 보기

들어본다고 속마음 그대로 얘기할까?

총선 개표가 종료된 이후 출구조사와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야권 의석이 187석을 기록하면서 ‘200석 안팎’을 예상했던 지상파3사 출구조사가 빗나갔고, 여론조사 역시 3월까지 실시해 발표된 정당 지지도 및 투표의향 조사를 보면 실제 결과와 비교해 많이 달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높은 사전투표율,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여론조사 응답률 등이 꼽힙니다.

출구조사를 거절하거나,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반대로) 응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구조사나 여론조사를 거짓으로 응답해도 되는지 묻고 답하는 게시글이 종종 눈에 띕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다양한 톨과 채널을 통해 유권자는 물론 기업에서도 고객, 직원 등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조사가 원하는 타깃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고객, 직원, 투자자 등과 같은 중요한 이해관계자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진정성 갖춘 관계 맺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싫은 게 더 싫어

이번 선거 역시 '비호감' 선거라는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좋아서 선택하기 보다는 덜 싫은 쪽을 선택하는 이른바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연일 이어졌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정성 있는 해명보다는 상대 측에 대한 더 심한 공격이 언론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국민의 실망감은 분노로 표출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유권자들은 편을 갈라 싸웠습니다. 선거판에만 존재하는 양상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호불호가 명확해졌으며 온-오프라인에서 행동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팬덤은 이를 더욱 강화합니다. 한 번 손상을 입은 평판을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항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미리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선거 결과의 함수

서울은 집값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높은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서는 대체로 국민의힘 후보자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영등포 을의 경우 여의도동에서는 1만8천표 중 국민의힘 득표가 약 12,500표로 70%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신길동, 대림동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양천갑 역시 아파트 단지가 많은 목1, 5동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으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목2,3,4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크게 득세하였습니다. 용산 역시 이촌1동과 한남동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권자들이 개인의 베네핏(특히 재산)을 고려한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각종 세제 정책, 경제 및 산업 활성화 정책, 국정 운영 정책 등에 비해 더 중요하게 판단되었다는 것이 주목할만합니다.

Communication Leadership Insight!

<대한민국 22대 총선 리포트>를 마무리하며 리더이거나 리더가 되고 싶은 모든 분들과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데 요구되는 3가지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1. Authentic Intelligence

리더는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진정성을 갖고 경청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 현실과 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판단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2. Kindness in Business and Life

친절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함은 행위입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친절함 마음으로 작은 액션을 실천하는 리더의 긍정 에너지는 전파력이 큼니다. 나 자신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절함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4월9일 발간된 James Rhee의 [red helicopter \(lead change with kindness plus a little math\)](#) 신간을 추천드립니다.)

3. Communication lead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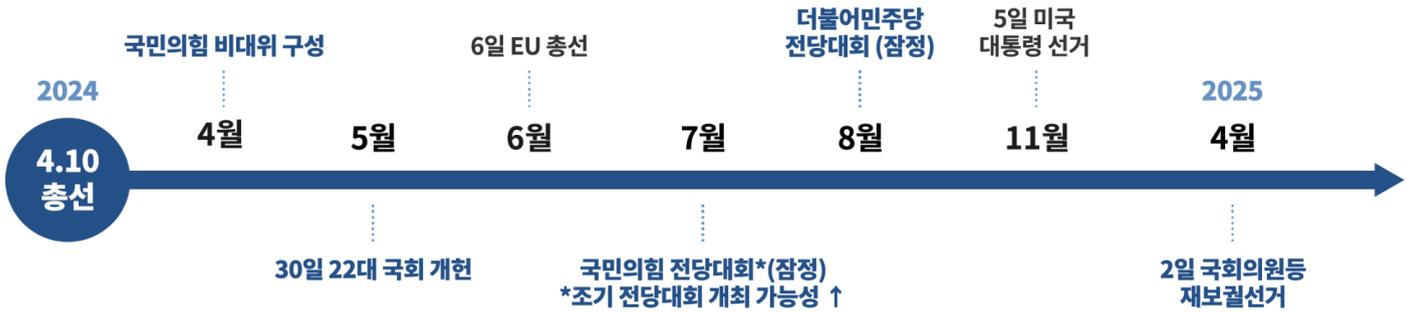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으로 변화와 혁신, 기업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리더는 구성원과 오디언스가 공감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을 이야기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할지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2024년 9월 발간 예정인, 오바마 스피치 라이터 Terry Szuplat의

["Say It Well: Find Your Voice, Speak Your Mind, Inspire any Audience"](#) 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향후 참고 일정



21대 - 22대 총선 결과 비교

주요 내용

	21대	22대
국회	21대 (2020.5 - 2024.5)	22대 (2024.5 - 2028.5)
대통령	문재인 (19대: 2017.5 - 2022.5)	윤석열 (20대: 2022.5 - 2027.5)
집권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	국민의 힘 (보수)



역대 선거 정당별 의석 수



투표자별 투표율

전체투표율	66.2%	67.0%
사전투표율 (전체/투표자수대비)	26.69% / 40.3%	31.28% / 46.7%

선거인 연령대	인구 구성비	투표율	인구 구성비	투표율
18	1.2	67.4	결과 미발표	
19	1.4	68.0		
20	15.3	58.7		
30	15.9	57.1		
40	18.8	63.5		
50	19.5	71.2		
60	14.8	80.0		
70	8.5	78.5		
80+	4.6	51.0		

역대 선거 초선 비율

초선	50.7%	44%
재선 이상	49.3%	56%

국회의원 연령별 분포

20-30	4.3%	4.7%
40	12.7%	9.7%
50	59.0%	50.3%
60	23.0%	33.3%
70+	1.0%	2.0%

국회의원 성별 분포

여성비율	19.0%	18.6%
------	-------	-------